

# 불법입찰 방지 지문인식 전자입찰 지문등록 착수

- 조달청, 4월 본격 시행 앞두고 2월부터 17만여 입찰업체 대상
- 야간 등록 및 사전 방문예약제 실시

문의 | 조달청 정보기획과(042-481-7193)

-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오는 4월 '지문인식전자입찰' 시행을 앞두고 올해 2월부터 전국 지방조달청을 통해 입찰자 지문을 보안토큰\*에 등록하는 지문등록업무에 들어간다고 1월 20(수)일 밝혔다.
  - \* 보안토큰 :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휴대용 저장매체로, 보안토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는 외부로 유출이 불가능하여 PC 해킹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
- 올해 2월 1일부터 실시되는 보안토큰 지문등록은 '지문인식전자입찰' 제도 시행을 위한 선행업무로서 전국에 소재한 지방조달청의 민원실을 통해 실시되며,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신원확인을 거친 후 현장에서 즉시 지문을 등록하게 된다.
  - 지문등록 대상자는 대표자를 포함 최대 총 27만여 명에 달하며, 일시에 지문등록자가 몰리는 혼잡 방지와 업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자 업체별가 직접 방문일자를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예약, 예정일시에 지문을 등록하게 할 예정이다.
  - 또한, 조달청은 부득이 일과 중에 지문등록이 어려운 업체를 위하여 지문등록 업무를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 〈지문인식 전자입찰 단계별 적용계획 및 업체별 지문등록 기간〉

적용일시	지문인식 전자입찰 적용 입찰	업체별 지문등록 기간
1단계 ('10. 4. 1)	조달청 집행(중앙조달) 시설공사 입찰 (감리·설계 등 시설공사 기술용역 제외)	'10. 2. 1 ~ 3. 31
2단계 ('10. 5. 15)	조달청 집행(중앙조달) 물품·용역 입찰 (감리·설계 등 시설공사 기술용역 포함)	'10. 4. 1 ~ 5. 15
3단계 ('10. 7. 1)	기관 자체 집행(자체조달) 물품·용역·시설공사 입찰 -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입찰	'10. 5. 16 ~ 6. 30

\* 원활한 지문등록을 위해 조달업체는 단계별 적용대상 입찰에 따라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 지문을 등록하여야 함

조달청은 그동안 불법입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기술적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전자입찰의 편리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증서 대여 등에 의한 불법입찰 원천차단이 가능한 생체 인식 기술을 통한 입찰자 신원확인 방법이 최적의 수단으로 확인되어 본격 시행을 준비해 왔다.

- 지문보안토큰의 신뢰성확보를 위해 나라장터에 적용 예정인 제품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품인증을 받았으며('09. 6월)
- 이와 함께, 위조지문 방어력을 연세대학 생체연구센터에 의뢰하여 검증한 결과, 현재 출시된 제품 중에서 위조지문에 대한 방어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09. 12월)

- 아울러, 하나의 입찰대리인이 2개 이상 회사를 대리하는 경우도 불법입찰 여부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어, 1인은 1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만 등록하도록 하는 '1인 1사 입찰대리인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 '1인 1사 입찰대리인 등록제도'도 정비기간을 거쳐 '지문인식전자입찰' 적용시기인 2010년 4월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 권태균 조달청장은 "도입되는 최신의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를 통해 불법전자입찰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적인 부분도 기획재정부와 이미 협의 완료하였으며, 사전 치밀한 준비를 통해 4월부터 본격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품질 시장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직거래장터 개최

### -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만남의 장(場) 마련으로 품질선진화 유도 -

문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실(031-260-4672)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김병문)는 소비자가 고품질의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장(場)인 '신재생에너지 제품 직거래장터'를 '10. 2. 4(목) 오후 2시에 에너지관리공단 별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 직거래장터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분야의 다양한 인증제품을 생산자(제조업체)가 소비자(시공업체 등)에게 전시, 홍보하여 고품질의 우수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이를 통해 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신재생에너지 제품에 대한 정보교류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선정시 중요한 평가요소인 '소비자 품질만족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금번 행사를 통하여 고품질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넓힘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고품질 제품에 대한 생산유발을 통하여 관련산업의 고용창출 및 수출산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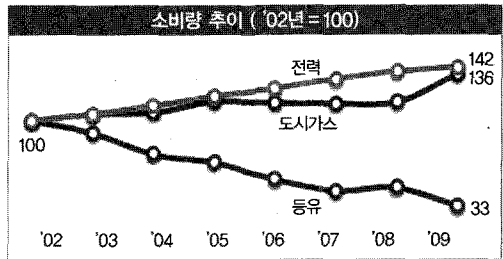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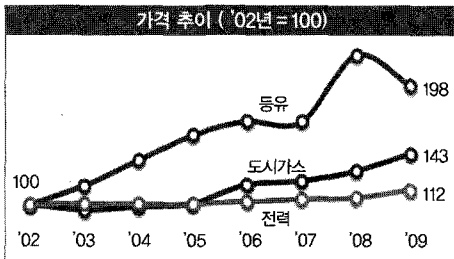
#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 본격 착수

- 금년중 모의시행을 거쳐 내년 전면 시행키로 -

문의 | 지식경제부 전력시장과(02-2110-5544)

- 지식경제부는 10일 「전기요금 산정기준1」(지경부 고시)을 개정하여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동 제도의 모의시행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음
- 연료비 연동제란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하여 소비자들이 타 에너지원과의 가격을 비교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국내에서도 도시가스요금·열요금·항공요금 등에 적용되고 있음.
- ◎ 정부가 전기요금에 있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현재 요금조정요인 발생시점과 실제 요금조정(정부 인가) 시점간의 시차가 통상 6~18개월 발생하여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대가격 왜곡 등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코자 한 것으로서,
- ◎ 작년 6월 이후 「고유가 대비 에너지소비절약 대책」('09. 6월), 「2010년 지경부 업무계획」('09. 12월), 「2010년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10. 2. 3) 등에서 이미 201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 본격 시행방침을 천명한 바 있음

〈에너지원간 가격 및 소비량 추이('02 ~ '09)〉



\* 가격이 자유화된 등유소비는 감소('02대비 67%↓)한 반면, 국제 연료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전기소비는 증가('02대비 42%↑)

- 지경부는 이와 같은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을 위해 전문기관(KDI,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과 美·日 등 선진국의 실태조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의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는 바, 금년 중 모의시행 할 제도의 핵심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음

① (요금구조) 연료비 조정항을 신설하여 연료비의 '변동분' 별도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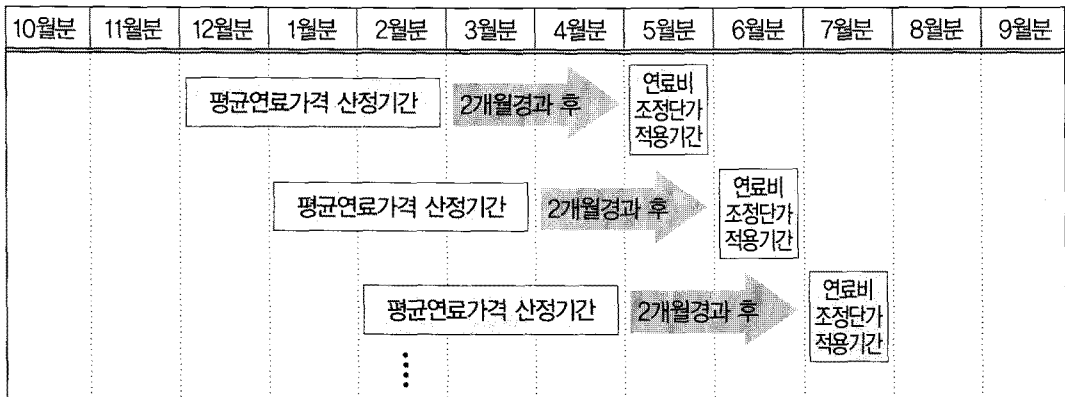
\*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 정기적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결정(연1회)

\* 연료비 조정요금 : 연료비 연동 규정에 의해 자동 결정(매월)

② (연동대상) ①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원화환산기준)에 연동하는 방안과 ② 한전이 전력시장으로부터의 구입전력비에 연동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비교·검토

\* 평균연료 수입가격에 연동할 경우 가격변동이 심한 연료(석유류, 석탄, LNG)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가격이 거의 일정한 원자력은 연1회 요금 조정 시 반영

③ (조정주기) 매월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연료 수입가격을 산정(이동평균)하여 기준연료가격과의 차이를 2개월 경과 후에 전기요금에 반영



\* 2개월 경과 후 : 평균연료 실적집계(15일) 및 사전예고기간(1개월)이 필요

④ (조정범위) 전기요금 변화의 안정성을 위해 상한 및 비(非)조정범위를 설정

- 연료비 급등시 물가영향·소비자 부담을 고려하여 연동항의 기준연료비 대비 150% 상한선 설정 (연료비 하락시 하한은 미설정)

- 요금의 빈번한 조정시 요금의 안정성이 저해되므로 연료비의 변동이 ±3%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조정

⑤ (요금규제방식) 공공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요금수입으로 보장하는 현행의 총괄원가규제에서 전기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인규제방식(예: 가격상한규제)으로 전환하되, 구체적 방안은 모의시행 시 함께 검토

■ 지경부는 금년 중 모의시행을 통해 연료비 또는 구입전력비 변동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수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타 에너지원간의 가격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금년 말까지 확정된 후 내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인 바,

○ 모의시행기간인 금년에는 실제 전기요금의 변동은 없으며, 내년에 동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연료비 또는 구입전력비의 변동 상황에 따라 실제 전기요금이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전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밝힘

# 신재생에너지업계, 금년에 투자 3.9조원, 수출 46억불 전망

- 산업계, 정부, 공공기관 등 국가전체 금년도 투자액은 5.5조원 전망 -

문의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02-2110-5402)

- 신재생에너지업계는 금년 한해동안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설비증설 및 R&D 등에 작년 24,558억원에 비해 57.9% 증가한 38,971억원을 투자하고,

〈국내 주요 신재생에너지원별 투자실적 및 계획〉

구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기타	계
'08년도	15,049	2,259	1,682	80	19,070
'09년도	18,575	4,936	355	692	24,558
'10년도	30,337	6,130	1,053	1,271	38,791
증감율	63.3%	24.1%	196.6%	83.6%	57.9%

○ 금년에는 작년 24.3억불 대비 90.2%가 증가한 46.2억불을 해외에 수출할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 주요 신재생에너지원별 수출실적 및 계획〉

구분	태양광	풍력	기타	계
'08년도	634	640	8	1,282
'09년도	1,656	762	10	2,428
'10년도	3,111	1,462	47	4,620
증감율	87.8%	91.8%	370%	90.2%

- 신재생에너지협회(회장 : 정지택)는 2월 3일(장소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과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를 갖는 자리에서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투자, 수출 실적 및 계획”을 통해 위와 같이 밝혔음

※ 신재생에너지업계 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RPA기관\*)의 투자계획까지 합한 국가전체의 금년도 신재생에너지분야 투자액은 작년도 35,924억원 대비 52% 증가한 54,655억원\*\*으로 전망됨

\*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기관 : 한전,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 지정부 8,083억원, 지방정부 1,309억원, 공공기관 6,472억원, 산업계 : 38,791억원

- 업계는 동 간담회에서 투자확대의 애로사항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RPS\*법안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였으며, 국산 개발제품에 대한 초기시장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 ◎ 그리고, 업계는 수출확대를 위해서 해상풍력의 Track Record확보를 위한 실증단지 건설, 수출금융의 지원확대, 해외판로개척 지원,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한 부품·소재 및 장비 국산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였음
- 신재생에너지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2010년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금년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수출산업화의 원년”이 되도록 총력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 ◎ 이는 그동안 정부재정 지원과 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초기시장 창출 및 산업화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신재생에너지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수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임
-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금년에 크게 산업육성 가속화, 수출산업화 촉진, 선진인프라 구축 세부분으로 나누어, 9가지 세부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음
- 「산업육성 가속화」를 위해서는 우선 서로 기술 및 산업기반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源별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일별 차별화된 산업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할 예정임
- ◎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R&D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좀더 체계적인 R&D 지원이 될 수 있도록 “R&D 혁신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 또한 인력, 금융, 세계 부문에서 산업육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여 “산업화 촉진을 총력 지원”할 계획임
-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源별 전략 지역·국가별 해외시장 진출 환경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시킬 계획임
- ◎ 그리고 업계의 수출애로 해결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KOTRA, 협회, 수출금융기관(수보, 수은 등), 정부 등이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운영하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할 계획임
- ◎ 또한 향후 거대시장으로 부상할 해상풍력 개발을 선점하기 위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기술개발·제도개선·계통연계 등을 포괄한 “해상풍력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해상풍력의 Track Record확보 및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선진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의 조속한 투자환경 조성과 최소한의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서 “RPS 도입 법령 정비를 조속히 완료”할 예정임
- ◎ 그리고 지금까지 양적 보급확대에만 치우친데 반해 보급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사후관리의 강화를 위해 보급사업 전수소사를 바탕으로 “보급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 또한 “선진국 수준의 정책지원기반 마련”을 위해서 국제기준(IEA) 및 선진국가와 상이한 신재생에너지 기준·범위를 재정립하고, 신재생에너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 혼합을 의무화하는 RFS 도입방안을 금년중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제품의 Test-bed기반을 전략거점에 구축할 계획임

# 태양광발전 CDM사업 국내 최대규모로 UN등록

## -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 타당성 평가 수행 -

문의 | 에너지관리공단 생활실천홍보실(031-260-4393)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李泰鎔)은 공단이 CDM운영기구(DOE\*)로서 평가를 수행한 '고창 솔라파크 14.98 MW 태양광 발전' CDM사업이 최근 UN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 CDM 집행위원회(EB)에서 지정하는 국제 공인 CDM 검인증기관
- '고창 솔라파크 14.98 MW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엔에 등록된 태양광발전 CDM사업으로서는 최대 규모로서, 연간 22,183 MWh의 전력(약 7,200가구의 연간사용량)을 생산하고, 동시에 13,523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CDM사업이다.
-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추진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사업자가 CDM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UN이 지정한 CDM운영기구가 타당성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UN의 CDM집행위원회에서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UN으로부터 전세계 CDM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CDM운영기구로 지정받은 후,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15개 검인증 전문야를 평가하고 있으며, 금번 사업을 포함하여 총 23개 사업을 UN에 등록(국내 13건, 베트남 5건, 중국 3건, 몽골 2건)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 이재훈 원장은 "금번 UN등록은 그동안 타 재생에너지 사업에 비하여 소규모로 진행되어 왔던 태양광발전 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 "최근 UN CDM집행위원회의 CDM사업 등록여건이 강화되고 지적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인증 전문성을 제고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의 심사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가스냉방 보급활성화 본격 추진

## - 우리나라의 가스냉방 비중을 10%P 높일 경우 연간 3,000억의 에너지 수요 관리 효과가 기대

문의 |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02-2110-5468)

- 지식경제부는 3. 5일(금) 설치비 보조금 지급, 대형건물 및 공공기관의 가스냉방 설치유도 등 가스냉방 보급확대 방안(첨부)을 발표하였음
  - ◎ 우선, 신규예산(50억)으로 금년부터 가스냉방기기 설치비의 최대 15%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
    - \* 보조금 사업 주관기관은 가스공사로, 보조금 신청은 가스공사 지역본부에서 접수
  - ◎ 또한, 가스냉방투자의 용자지원을 확대\*하여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냉방용 가스의 소매공급비용을 인하\*\*하여 운영비 부담을 줄일 방침임
    - \* (지원대상) 실외기 → + 실내기·배관, (지원비율) 설치비의 80% → 100%
    - \*\* 냉방용 소매공급비용을 적정원가 수준까지 인하시 소비자요금 10%이상 하락예상
  - ◎ 한편, 가스공사와 기기업체가 협력하여 국산 가스냉방기기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고효율 기종 인증기준 개정, 가스냉방기기 검사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임
  - ◎ 추가로, 가스냉방 선수요 확보를 위해 공공청사 신·증축시 가스냉방 설치를 확대하고, 대형건물 에너지절약 계획 제출대상 확대를 통해 가스냉방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음
  - ◎ 가스냉방 신규설치가 금년에 약 17% 증가(전년대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내년부터는 그 증가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 가스냉방 신규설치 : '09년 8.5만 RT → '10년 10만 RT(예상)
-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하여 하절기 전력피크와 동고하저(冬高夏底)의 가스수요패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수단이고,
  - ◎ 가스냉방기기 보급은 시스템에어컨(EHP)을 대체하여 최근의 겨울철 난방용 전력피크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가스냉방이 차지하는 비중을 10%P 높일 경우, 매년 약 3,000억의 효과 기대(LNG발전소 건설 5기, LNG저장탱크 건설 3.5기 감소)
  - ◎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스냉방 비중이 약 12.4%에 불과(일본은 22.6%)하였는데, 이는 전기냉방보다 설치·운영비가 높고, 정책적 지원도 부족하였기 때문임
- 한편, 지식경제부는 3. 5일 10시 aT센터에서 가스냉방 보급확대 방안을 업계 및 소비자에 설명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행사에서 가스공사와 기기 생산업체(LS엘트론, 신성엔지니어링)간 효율개선 협력 MOU 체결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임
  - ◎ 동 MOU는 국산방기기의 효율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을 그 내용으로 하여, 향후 국산 초고효율 가스냉방 기기개발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임



# 국가기술자격, 산업현장 수요에 맞춰 개편한다

## - 워드프로세서 2·3급 민간자격전환, 기상감정·화재 감식 등 자격 신설 -

문의 | 노동부 자격정책과(02-2110-7281)

- 올해부터 시시각각 변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국가기술자격 체계가 개편된다.
- 노동부가 17일(수) 발표한 「제2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10~'12)」에 따르면,
  - ◎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등 국민일반의 보편적 자격이 되어 산업적으로 수요가 적어진 경우 민간자격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태양광 발전·기상 감정·화재 감식 등 녹색산업 및 신성장동력 분야와 관련된 자격은 신설을 추진한다.
  - ◎ 또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종목의 틀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 이는 556종목에 이르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및 직종'과 '등급' 분류 체계\*가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기능(skill)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데서 이뤄진 것으로,
    - \*'09년말 기준 분류 체계 → 27개 직무분야 180직종(type), 5등급(level)
    - 이를 위해 전 산업분야에 걸쳐 직무 및 직종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기능(skill)을 파악, 자격운영 및 훈련, 고용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skill map」을 만들 예정이다.
- 「제2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은 자격의 궁극적 수요자인 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 ◎ 정부는 자격정책 결정 과정에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여 산업별 협·단체가 산업계 수요 파악 및 출제기준 개정, 자격종목 개발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현장 전문가의 참여 비율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 현장전문가 참여비율 목표 : 40%('09) → 50%('10) → 60%('11) → 70%('12)
- 한편,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검정 방법도 다양화 시킬 계획이다.
  - ◎ 이를 위해 필기·실기 시험 등 정형화되어 있는 검정 방법을 종목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 현장실무능력인증\*, 면접·구술시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검정 방법도 도입하고자 한다.
    - \* 실무경력, 훈련이력, 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임태희 노동부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학력중심 사회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국가기술자격이 학력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